

광주지역 학폭 재심, 가해자 면죄부 논란

가해자 이의신청 인용률 35%...피해자는 16% 그쳐

전문가 “관대한 재심 인용이 되레 학폭 키운다” 우려

학교에서 내려진 1차 학폭위 징계의 적절성과 경중을 다시 따지는 ‘학교폭력 재심기구’가 가해 학생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위원회로 전락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자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비율이 높은 반면, ‘무거운 징계’를 요구하는 피해 학생에 대한 인용률은 매우 낮다는 것이다.

4일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 들어 지난해 30일까지 가해자 재심청구는 모두 62건으로 이중 가해자의 요구를 수용한 인용률은 전체의

35.48%인 22건이었다. 기각은 64.52%인 40건이었다.

반면 피해자 재심청구는 모두 56건으로 이 중 인용·기각은 각각 9건(16.07%)·47건(83.93%)이었다. 인용률은 따지면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19.41%포인트 높다.

연도별 가해자 인용률은 ▲2014년 33.33%(9건 중 3건) ▲2015년 33.33%(9건 중 3건) ▲지난해 54.54%(11건 중 6건) ▲올해 28.57%(21건 중 6건) 등이다.

피해자 인용률은 ▲2014년 14.29%(7건 중 1건) ▲2015년 14.29%(7건 중 1건) ▲지난해 11.11%(27건 중 3건) ▲올해 26.

67%(15건 중 4건) 등이다.

학교폭력예방법상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고 판단하면 광역시·도에, 처벌이 과하다고 판단한 가해학생은 시·도교육청에 재심을 요청하도록 돼 있다. 주로 가해학생들은 징계 사실이 생활기록부에 남을 경우 상급학교 진학에 결격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재심을 청구하고 있다.

두 재심기관의 인용률이 큰 차이를 보임에 따라 피해학생들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 재심기구가 가해자에게 관대한 반면 피해자에게 엄격한 인용 결정을 내린다고 보기 때문이다. 피해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는 ‘가해자 재심기구=면죄부 위원회’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한 학부모는 “학교 폭력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본 피해자들은 평생 고통을

받고 살아야 한다”며 “교육적으로 가해 학생들을 보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지만 지나친 온정주의는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징계 수위를 다시 가리는 재심 기구가 사실상 가해자 편에 선 결정을 자주 내리면서 오히려 보복성 폭력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

전문가들은 “이원화된 재심기구를 단일화한 뒤 피해 학생의 의견을 받도록 법적 의무화를 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광주시민단체 관계자는 “가해자 재심 청구가 느는 것은 인용률이 높기 때문”이라며 “자칫 학교폭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행위로 이어지지 않을 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대형탱크 안 작업 근로자 질식 추락사

순천서 1명 사망...2명 부상

순천의 한 공장에서 작업중이던 근로자 3명이 추락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4일 순천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7분께 순천시의 한 폐유정제업체인 D사의 대형 탱크(높이 7m, 직경 3m) 안에서 작업하던 류모(50)씨와 서모(32)·선모(32)씨가 가스에 질식해 7m 아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류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

나 숨졌고 서씨와 선씨는 허리를 다치고 얼굴과 다리 등에 찰과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근로자들이 탱크 안에서 사다리를 타고 작업하던 중 가스를 마시고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 여수고용노동지청은 이날 인명사고가 발생한 D사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9명으로 구성된 조사반을 현장에 투입,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현영기자 young@

급유선 선장 “피해 갈 줄 알았다”

인천 영흥도 낚시배 참사

충돌 방지 노력 제대로 안해

해경, 선장·갑판원 영장 신청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배를 들이받아 13명의 사망자를 낸 급유선 선장이 해경 조사에서 “낚시배가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는 진술을 했다.

해경은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당시 급유선 조타실에서 조타기를 잡은 선장이 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갑판원 1명과 함께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인천해양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336급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전 6시9분(해경 신고 접수 시간) 인천시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

상에서 9.77급 낚시배 선장1호를 들이받아 낚시꾼 등 1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선장1호 승선원 22명 중 사망한 13명 외 선장 오모(70)씨 등 2명이 실종됐으며, 나머지 7명은 구조됐다.

선장 전씨는 해경 조사에서 “(충돌 직전) 낚시배를 봤다”면서도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사고 시간대 당직 근무자로 급유선 조타실에서 조타기를 잡고 있었다. 그러나 또 다른 당직 근무자인 갑판원 김씨는 당시 조타실을 비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급유선 운행 시 새벽이나 아간 시간대에는 2인 1조로 당직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 당직자는 전방을 주시하며 위급 상황 발생 시 선장에게 알리는 보조 역할을 한다. 해경은 갑판원인 김씨가 조타실을 비운 사이 선장 혼자 조타기를 잡고 급유선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영학 사선 변호인

선임 사흘만에 사임

여중생을 납치·추행·살인한 혐의를 받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35·구속기소)의 사선 변호인이 선임 사흘 만에 그만뒀다.

4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이영학의 변호를 맡기로 했던 A(39·변호사시험 4기) 변호사는 지난 1일 법원에 소송대리

인 사임서를 제출했다.

이영학은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오다가 지난달 28일 A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는 이씨가 법정에서 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려는 것으로 풀이됐다.

이영학은 지난달 17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국선 변호인을 통해 환각 증세가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의 두번째 공판은 오는 8일 열린다. /연합뉴스

“산나지 먹고 싶어서”...식당 수족관 깨고 해산물 훔쳐



○...군산에서 산나지를 먹고 싶은 마음에 음식점 수족관을 깨고 해산물을 훔쳐 60대가 쇠고랑.

○...4일 군산경찰에 따르면 A(63)씨를 지난달 27일 새벽 3시 50분께 군산시 구암동 한 음식점 수족관에 돌을 던져 깨뜨린 뒤 산나지 등 해산물을 훔쳤다는

것.

○...경찰은 음식점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붙잡았는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산나지 등이 먹고 싶어 그랬는데, 집에 오는 길에 해산물을 담은 비닐봉지를 잃어버려 결국 먹지도 못했다”며 서처를 호소.

/군산=박금석기자 nogusu@

“학폭위 학부모위원 전문·객관성 부족”

국회 입법조사처 “비율 줄여야”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학부모위원의 전문성과 객관성이 떨어져 이들의 비율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학교폭력 사안 처리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학부모위원 대부분이 사안을 심의하기에는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다”면서 “자녀가 가해·피해 학생과 같은 학교에 다니고 같은 지역에 거주하며 형성된 관계 등 탓에 객관적인 심의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보면 학폭위는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의 과반을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위원이 차지하게 돼 있다.

국회에는 현재 학부모위원 비율을 줄이고 법조인 등 외부위원을 늘리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5건 발의된 상태다.

입법조사처는 학교폭력 관련 문건 관리·보존규정이 미비하다는 점도 문제로 삼았다. 각 시·도 교육청이 국가기록원 ‘학교기록물 관리 지침’을 토대로 만든 지침이 있지만, 학폭위 회의록 외 문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또 학교폭력예방법에 규정된 학교장 의무에 사건을 축소·은폐하지 않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학교·학교장 책임 강화 등도 주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고생한 수험생들 맘껏 즐기세요”

4일 광주시 북구 청소년수련관 공연장에서 열린 ‘고3 수험생, 청소년 UP! GO! 놀자!’ 행사에 참가한 수험생들이 공연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보조금 횡령’ 전 시립극단 예술감독 검찰 송치키로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 등으로 전 광주시립극단 예술감독 A(64)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2~2016년 광주시립극단 예술감독으로 있으면서 극단에 지원된 문화

예술 관련 광주시 보조금 2억1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극단 공연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에 돈을 집행했다고 속이는 방식 등으로 보조금을 일부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극단에 지급된 관련 보조금은 4억4000만원으로 확인됐다.

광주시와 광주문화예술회관은 최근 시 징계위원회를 열고 A 감독을 지난달 29일

해촉했다.

A 감독이 2018년 4월7일까지였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해촉되면서 문예회관측은 시립극단 정상화를 위해 새 예술감독 선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문예회관은 “이달 중 시립극단 예술감독 모집공고를 낼 예정이다”며 “최대한 빨리 절차를 진행해 늦어도 1월 말까지는 시립극단의 새 감독을 선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

부동산 투자 !
최 선 규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

오천경매 H. 010-3605-5000